

‘골목형 상점가’ 늘어나는데 실효성은 ‘글썄’

광주·전남 지자체별 24곳 지정
온누리 상품권·시설설비 지원
시민홍보·상인체감 부족 지적
지자체 “홍보 등 활성화 노력”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서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시설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시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투입과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북돋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서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 중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다.

농어촌과 지방 도시 등의 경우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조례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점포 개수가 30개 이하인 구역도 지정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입,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와 전남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각각 15곳, 9곳 지정돼 있다.

기초단체별로 광주는 북구 9곳, 광산구 4곳, 남구 2곳이며 동구와 서구는 아직 지정된 상권이 없다. 전남에서는 무안 3곳, 강진·곡성·구례·나주·함평·해남 1곳 등이다.

골목형 상점이 지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북구의 경우 올해 안으로 관내 20곳 이상의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각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게 시민과 상인들의 반응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체감하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다.

장원준(22)씨는 “골목형 상점가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사업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는 상권을 돌아보니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표시가 있는 가게와 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상인들은 골목형 상점이 지정 이후 혜택을 체감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광식(78)씨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이 단 1명뿐이었다”며 “시설 지원 등 혜택도 받아본 적이 없다. 개소 수 늘리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순호(44)씨도 “간혹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있긴 했다. 하지만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며 “구청 관계자들이 상권 조사 등을 나오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평했다.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과 상인들에게 홍보해 골목형 상점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있어 일부 상권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다”며 “중앙기관 등과 협조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에서 각종 지원 공모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자부담금이 드는 경우도 있어 상인들의 응집력 또한 필요하다. 관련 예산 등을 투입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홍보하는 등 골목형 상점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추석 나눔 송편 빚기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3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랑과 나눔 추석 명절 용품 나누기’ 행사에서 송편을 빚고 있다. 송편과 생활용품은 어려운 가정과 홀몸 노인, 중증장애인 가정 800세대에 전달된다.

김양배 기자

폭염 속 숨진 에어컨 설치 노동자 유족, 진상규명 촉구

지역 시민단체·유족 기자회견
광주노동청 앞 분향소 운영

폭염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노동자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에어컨 설치 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 사망사고 대책회의’는 3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에어컨 설치기사양모(27)씨가 숨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발주처인 전남교육청, 원청인 삼성전자와 삼성에어컨 설치업체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과 기관은 양씨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숨지게 하고 열사병 증상이 발생한 후에도 약 1시간 가까이 뜨거운 햇빛에 방치했다”며 “건강했던 양씨를 마치 지병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사과 요구에도 들은 적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유가족들은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삼성전자 등은 고인의 죽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광주고용노동청 정문에 분향소를 설치, 무기한 농성에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 사망사고 대책회의’가 3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4시40분께 에어컨 설치기사 양씨는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

글·사진=정상아 기자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